

테마칼럼

이성체제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칼럼

월드컵 단상



김 어 준 (편지일보 총수)

방송에선 자꾸 다 잊고 이제 2010을 기억한다. 천만의 말씀. 결과는 받아들여져 억울함은 잊지 말자. 그리고 다시는 억울한 경우 당하지 말자. 그게 승자의 자세다

1. 이번 월드컵, 이번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전통의 강호들이 예외 없이 16강에 진출했다. 동시에 이번 월드컵은 심판의 월드컵이라고도 한다. 오심논란이 없었던 월드컵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 오심논란 대부분은 주최국 홈 어드밴티지나 그야말로 심판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들이었다. 월드컵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인 86년 마라도나의 신의 손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 유별난 건 주최국 독일이 오심논란 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피파회장의 나라인 스위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국가 그리고 남미의 강호들이 비유럽, 비남미 국가들과의 경기에서 단차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심판들은 결정적 장면에서 거의 예외 없이 그들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고 있다. 지난 2002년 우리를 비롯해 세네갈, 터키, 일본, 미국 등 소위 축구 변방의 나라들이 대거 16강에 진출하고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아르헨티나 등 전통의 강호들이 연이어 조기 탈락하자 한편에선 축구의 세계화, 평준화를 예찬했지만 유럽에선 시청률 하락과 추락하는 광고수익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이야기했었다. 2002년 학습효과는 충분했다. 축구클럽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만큼 철저히 측구가 산업화된 유럽에서 방송사, 시청률 그리고 광고수익을 위해서는 자국 팀을 포함한 전통 라이벌들 간의 '빅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심판들의 판정은 단순히 경기 결과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의 손익을 좌우한다. 심판들이 그러한 정치적·경제적·산업적 유행의 압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게다. 그리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던지라 유난히 오심논란이 많았던 걸로 기억되는 2002년 월드컵은 그 어느 대회보다 많은 비유럽, 비남미 국가가 16강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사실은 가장 공정한 대회였던 게다. 전통의 강호들이 과거의 강호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으니까. 2. 스위스전은 명백히 편파적이었다. 게임 전체를 통해 불리한 판정이 한 둘이 아니었다. 비슷한 전력의 양팀 경기에선 잘못된 판정 한 둘이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월드컵에서 그런 대우를 받은 건 사실 이 번만은 아니다. 86년 대회 예선 마지막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1대1 동점 상황 이후, 시뮬레이션 페널티킥과 오프사이드 지역에 서의 골로 졌다. 당시 외국 언론들은 편파판정이 이탈리아를 구했다고 했었다. 90년 대회의

우루과이와 마지막 경기 역시 오프사이드 골이었다. 94년 대회와 98년 대회 역시 우리에게 불리한 판정은 한 둘이 아니었다. 특히 백패를 금지가 강화된 툴이 적용됐던 하석주의 퇴장은 98년 대회 최초의 백패를 퇴장이었을 뿐 아니라 하석주 퇴장이후 대회 전체를 통해 그 정도 백패를 퇴장당한 선수는 아무도 없었다. 변방 국가에 본보기를 보였던 셈이다. 우리가 이들 판정을 스위스 전만큼 억울하게 기억하지 않는 건, 억울해 할 줄도 몰랐기 때문이다. 낮은 자존감으로 때 맞는 아녀처럼 그저 스스로를 책망했을 뿐이다. 우리가 못해서 졌다고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억울해 한다. 이겨봤기 때문이다. 승리에 대한 집단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억울해 하는 자체가 변화다. 내겐 그 점이 희망이다. 자존감의 크기가 달라졌다. 방송에선 자꾸 다 잊고 이제 2010을 기억한다. 천만의 말씀. 결과는 받아들여져 억울함은 잊지 말자. 그리고 다시는 억울한 경우 당하지 말자. 그게 승자의 자세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시장'과 '공익성' 고민한 언론법 현재결정

공개변론까지 열어가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부분 위헌'결정을 내렸다. 주요결정을 간추리자면 거대신문들에 대해 정부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규정으로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신문법 17조)은 위헌이지만, 신문사들로 하여금 발행부수와 광고수입 등 경영자료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신문법 16조)한 것은 언론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합헌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또 정정보도 소송을 낼 때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규정(제26조6항)은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판단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참여정부와 국내 메이저 신문사들간 일대 회전으로 여겨졌던 언론관계법 헌법소원은 청구 1년 반만에 양측의 부분적 승리로 끝난 셈이다. 우리는 이번 현재의 결정이 언론의 시장원리와 공익성 사이에서 크게 고민

한 결론이자 우리사회의 가치 다원성 속에 절충적 해법을 제시한 결론이라고 본다. 소원을 낸 메이저 신문들로서는 경영자료를 제출토록 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불만일 것이고 여당과 정부로서는 거대신문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낙인찍지 못하게 한데 불만일 것이다. 따라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국회법개정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현재의 위헌결정 부분을 최대한 확대 해석하려 할 것이다. 야당 대변인은 벌써 "참여정부 언론정책의 패배"라며 흥분하고있다. 여당은 법을 고치면서도 당초 취지를 어떻게 살려보려 할 것이다. 여당 대변인이 이미 그렇게 말하고있다. 언론에 관한 법률을 다루는데 여야의 호 불호가 이렇게 갈리던 건 전생선사. 부디 법개정 과정에서 여야는 헌법재판관이 했던 고민을 진지하게 되새겨 공평하고도 수평이 긴 개정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납득못할 국제청장 사임, 정권 의혹 키운다

이주성 국제청장의 돌연한 사임을 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다. 이 청장은 "격무 때문에 건강상 업무 수행이 한계에 이른데다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용퇴한다"고 사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를 끝이끝대로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인사철이 아닌 데다 이청장이 그동안 의욕적인 세정을 펼쳐 왔으며 사퇴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국제청의 인사체제가 극심하지도 않다. 국민들이 이청장의 사퇴 배경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국제청장이란 직위의 막중한 때문이다. 차관급에 불과하지만 조세정책 집행은 책임지는 자리로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이른바 4대 핵심권력 기관의 책임자다. 장관들보다 먼저 국회 인사 청문회 대상이 됐을 정도로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런 자리의 책임자가 석연찮은 사퇴의 변을 남긴 채 스스로 물러난 만큼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항간에는 청와대와의 인사 갈등설이나 조세정책 집행과정에서의 정치적 위압, 부적절한 처신 등 갖가지 소문이 무성하다. 세금 징수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코드가 맞지 않았다는 얘기도 퍼지고 있다. 개각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공연한 의혹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고위 공직자 임명이나 경질 시 그 사유를 공개할 책임이 있다. 특히 인사나 정책 집행을 둘러싸고 여론과의 마찰로 권력기관 책임자가 사퇴했다면 국민들은 그 경위를 소상히 알 권리가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다양하게 제기된 추측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며 "일 사수통을 쓰기 위한 용퇴"라는 식의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줄곧 투명한 인사와 정책 집행을 강조해 왔다. 청와대가 이번 사퇴파문을 어쩔적 넘어가려 한다면 현 정권의 의혹만 키울 뿐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광수 (사진) 공공구매제도의 경우 올해부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많은 개선과 보완을 하였다. 우선 120개 공공기관이 매년 구매계획을 작성, 이행여부를 점검토록 했다. 특히 성능인증, NEP(신제품인증), NET(신기술인증), GS, 우수조달제품 등록 등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5.8%를 구매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새로 개편·시행되는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제도(141개 품목), 공사용자재의 분리구매제도(87개 품목),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중소기업

기고 한병선 (사진) "어? '교사십계명운동'이란 것도 있네", "교사십계명 선생님 파이팅", "교사십계명운동에 동참을", 요즘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표현들이다. '교사십계명운동'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작은 증거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들이 교직사회 내부에서 자성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쨌든 이런 반응들은 그동안 교직사회가 여러 면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증거로, 교직사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는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직사회가 책임을 회

'판로개척의 비타민' 공공구매제도 등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등에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판로지원 관련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상당수 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들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판로관련 많은 제도 가운데 중소기업청의 판로지원 정책과 사업을 들여다보자. 중소기업정책정보시스템(www.spi.go.kr)에 들어가면 판로지원 정책을 한눈에 알 수 있다. SPI 사이트로 들어가서 분야별 정책정보의 판로 부분을 클릭하면 10건의 정책정보가 화면에 나타난다. 공공구매 종합DB,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성능인증제도, 소액구매 중소기업간경쟁제도,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등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판로지원정책이 나열되어 있다.

'교사십계명' 실천 선생님, 파이팅!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교직사회에는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교직사회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주변에 책임이 있다는 면피(免避)적 태도는 곤란하다. 이런 태도는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교직내부의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 어렵긴 해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발전적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해답은 간단하다. 지금보다 학생들을 더욱 사랑하고 이들과 인격적 만남을 지향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마음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사랑해 주길, 그리고 아이들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주길 원하고 있다. 이를 충족시켜주는

우회로 신호기 철저히 지켜 사고 예방해야 호를 무시했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던 시민을 뒤늦게 발견, 급정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한 이유는 신호를 지켜 사고를 줄이자는 의도로, 보고 지나쳐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회전 신호를 무시했다가는 자칫 횡단보도에서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지키는 운전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강석훈·광주시 남구 주월동

금연식당에서 흡연 즐기는 손님 '꼴불견' 최근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생긴 일이다. 손님들로 붐비는 시간에 식당 계산대 앞 자리에 앉은 남자 2명이 담배를 꺼내는 것을 보고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가게는 금연입니다"라고 귀뜸해줬다. 남자손님은 "아, 네 알른 끄겠습니다"라고 말해 그런줄로만 알았는데, 열른 끄겠다는 담배를 입에물고 계속 피우대고 있었다. 다른 손님들에게 죄송했지만 내 가게를 찾은 손님인데다 또다시 같은 말을 하기도 힘들어 그냥 참았다. 그런데 이 손님이 피운 담배 풍초를 재떨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표 지급합니다.

無等鼓 월드컵 PTSD 심한 사람은 16강 탈락의 충격으로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外傷後障礙) 증상을 보인다는 소식이다. 이 모든 것들은 2002 한·일 월드컵에 하는 것 같다. 분노를 삭이지 못한 네티즌은 재경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죽하면 FIFA가 홈페이지의 한국 접속을 차단했을까. 지난번 수비 위주 전술에 대한 비난도 각(錯覺) 시리즈에 '한국 당연히 16강에 진출한다'는 게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히딩크에 대한 항수(懸愁)는 '새로운' 4강 전까지 계속될 것이다. 한국이 펴 베어벡(Pim Beek) 코치를 새 감독으로 선임했다. '월드컵 수능'을 목전(目前)에 두 과오를 피할지 모르겠다. 펴 베어벡이 즐거움을 즐치, 아니면 또다시 집단적인 PTSD를 몰고올지 두고 볼 일이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편집국장 池炳源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기 1992년 2월 20일 2006년 6월 30일 2006년 6월 30일 2006년 6월 30일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외)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29 문화정책부 2200-626 경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77) 조 사 부 2200-570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지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시 설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독자투고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